

보도시점 2025. 10. 30.(목) 10:20 이후 사용 배포 2025. 10. 30.(목) 09:00

## “부동산 불법행위, 확실히 근절하겠습니다”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·수사 범부처 역량 결집

- 국토교통부·금융위원회·국세청·경찰청 집중 조사·수사 경과 및 계획 발표
- 부동산 감독기구 설립 등을 위한 ‘부동산 감독 추진단’ 11.3(일) 출범

### 개 요

- 국무조정실(실장 윤창렬), 국토교통부(장관 김윤덕), 금융위원회(위원장 이덕원), 국세청(청장 임광현), 경찰청(청장 직무대행 유재성)은 10.30(목) 10:00 정부 서울청사에서 **합동 브리핑**을 개최하여 **부동산 불법행위 조사·수사 경과와 계획**을 발표하고, **부동산 감독기구 출범·설립방향**을 설명하였다.
- 정부는 **부동산 불법행위**를 시장을 교란할 뿐만 아니라 서민과 청년들의 경제적 기반을 파괴하는 **악성 범죄**로 인식하고, 집중 대응하고 있다.
  - 특히, 새정부 출범 후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**서울·경기지역 부동산 이상거래**와 외국인 투기(국토교통부), **대출규제 위반과 용도 외 유용**(금융위원회), **편법 증여 등 부동산 탈세**(국세청), **집값 띄우기 등 8대 불법행위**(경찰청) 등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**조사·수사**를 진행해 왔다.
- 이날 브리핑은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,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, 금융위원회 사무처장, 국세청 자산과제국장, 경찰청 수사국장이 진행하였으며, 각 부처별 집중 조사·수사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### 국토교통부

- 국토교통부는 서울 주택 이상거래, 전세사기 및 기획부동산 등 **불법행위 전반**을 지속적으로 **조사**하여 위반이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**통보**하는 등 **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조성**을 위해 **노력**하고 있다.

- 그 결과 현재까지 의심거래 **2,696건**을 국세청·금융위 등 관계 행정 기관에 **통보**하였고, 그 중 **35건**은 경찰청에 **수사의뢰**하였다.

※ 기획조사 현황\*

	서울주택이상거래	부동산직거래	전세사기	기획부동산	총계
행정기관 통보**	376건	304건	893건	1,123건	2,696건
수사의뢰	1건	3건	19건	12건	35건

\* '25.6월 이후 관계기관 통보 및 수사의뢰 기준

\*\* 1건의 거래가 다수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된 모든 기관에 통보

**사례1** A는 서울 ○○구에 소재한 아파트를 자기자금 없이 부모로부터 1억원 증여, 29억원 차입 등 총 30억원을 조달하여 매입,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로 국세청 통보

**사례2** B는 경기도 소재 아파트를 5.8억원에 매매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, 실제 거래당사자 간 이체금액은 총 6.3억원으로, 거래금액 거짓신고(‘다운계약’)로 지자체 통보

- 향후에는 수도권 주택 이상거래로 **조사대상을 확대**하고, **집값 띄우기,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** 조사도 완료할 계획이다.
  - (수도권 이상거래) 10.15 대책 후속조치로 서울 전체, 경기 12개 지역 및 풍선효과 우려지역(화성동탄, 구리 등)에 대해 **기획조사**를 실시하고, **합동 현장점검**을 병행하여 **토지거래허가 관련 실거주 의무 위반** 및 **편법증여 등 자금출처**에 대해 **집중점검**할 예정이다.
  - (집값 띄우기) 서울 아파트 계약 후 해제 신고('23.3~'25.8) 중 425건('23년 135건, '24년 167건, '25년 123건)을 선별해 조사 중으로 '25년 1~8월 해제건에 대한 **우선조사**를 통해 **의심정황 8건**을 **수사의뢰**하였으며, '23~'24년 의심거래에 대해서도 **조속히 조사**를 마무리할 계획이다.
  - (외국인 이상거래) **해외자금 불법반입, 무자격 임대업 및 편법 증여** 등 위법 사항을 중심으로 **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605건**을 조사 중으로 이 중 주택 거래분은 **10월 중** 조사를 **완료**하고, **비주택·토지** 거래분에 대해서는 **연말까지** 조사를 **마칠** 예정이다.

**사례1** ○○국적 매수인 C는 서울 ○○구에 소재한 아파트를 49억원에 매수하면서 **본인이 사내이사로 있는 법인**으로부터 38.04억원을 차입하였다고 신고하였으나, 회계처리가 확인되지 않아 **법인 자금 유용 등이 의심**

**사례2** ○○국적 매수인 D는 서울 ○○구 일대 총 4건의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매매대금 17.35억 중 5.7억원이 **외화 반입 신고 없이 현금**을 들고 입국하거나 같은 국적의 지인들에게 **환치기 수법**으로 현금 조달 등 **해외자금 불법반입 의심**

○ (미성년자 등) 그밖에 **미성년자의 주택 매수나 분양권 거래**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병행하여 **시장교란행위를 차단**할 계획이다.

□ 국토교통부는 시세교란 행위에 대해 연말까지 **집중 신고기간** 운영을 통해 부동산 **불법행위에 적극 대응**하고,

○ 부동산 **특별사법경찰** 지명 및 수사 착수 등 **시장 감독 기능의 실효성**을 지속적으로 **강화**해 나갈 계획이다.

**금융위원회·금융감독원**

□ 금융위·금감원은 '25.7월부터 **쏠 금융권**을 대상으로 **사업자대출**을 받아 **용도외로 주택 구입에 활용**하는 **사업자대출 용도의 유용 여부**를 집중 점검중이며, 이 중 **은행권**에 대한 **점검을 완료**하였다.

○ 은행권에서 **신규 취급**(‘25.1~7월)된 **사업자대출 5,805건** 점검\*결과, **용도의 유용 45건**(대출총액 119.3억원)을 **적발\*\***하였으며, 현재까지 **25건**(환수금액 38.25억원)에 대해 **대출금 환수조치**를 완료하였다.

\* (개요) 점검기간 : '25.7~10월 / 대상기관 : 7개 은행 / 점검대상 : 사업자대출

\*\* 적발건수(금액)는 잠정 수치로, 추후 변동 가능

- 아직 **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20건**에 대해서는 **차주 소명** 등 관련 절차를 거쳐 **연말까지 대출금 회수** 등을 마무리할 계획이며, **위반 차주**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**해당 은행에서의 신규 사업자대출 취급이 제한\***된다.

\* (사업자 대출 용도 외 유용) <sup>1회</sup>1년 / <sup>2회</sup>5년 제한(상환일 기준) (은행권 자율 가이드라인)

**사례1** 차주 E(개인사업자)는 ○○은행으로부터 **기업운전자금 4억원**을 대출받아 **배우자 계좌로 송금 후 주택구입용도로 사용**

**사례2** 차주 F(개인사업자)는 ○○은행으로부터 **지자체 중소기업 육성자금대출 1억원**을 대출받아 **주택구입용도로 활용**

□ 금융위·금감원은 현재 진행중인 **상호금융, 저축은행 등 2금융권**에 대한 **현장점검도 11월까지 마무리**할 계획이며,

○ 앞으로도 **사업자대출의 용도의 유용 및 대출규제 위반·우회사례** 등에 대한 **점검**을 지속해나갈 예정이다.

□ 또한 **사업자대출을 받아 주택구입에 활용**하는 등 **용도의 목적으로 유용**하는 **차주**에 대해 현재는 **해당 금융회사에 한해 신규 대출**을 제한하고 **관련 정보는 다른 금융회사 등과 공유**하지 않고 있으나,

○ 앞으로는 **사업자대출**에 대해서도 **가계대출과 동일\*하게 약정위반 정보**를 **신용정보원에 등록\*\***하여, **해당 금융회사 뿐만 아니라 모든 금융회사**가 이를 **여신심사에 활용**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. 아울러, 향후 **모든 금융회사**에서 **위반 차주의 신규 사업자대출 취급을 제한**할 수 있도록 **관련 내용**을 **규정화**해 나가는 것도 **적극 검토**할 예정이다.

\* 약정(예 : 추가주택 구입 제한, 기한 내 기존주택 처분 등) 위반 정보를 신용정보원에 등록 → **쏠 금융회사의 신규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**(3년) (은행권별 감독규정)

\*\* 「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」(신용정보원) 개정 → 전산시스템 구축 → 시행('26.1월, 잠정)

**국 세 청**

□ 국세청은 **시장과열**이 나타나는 지역을 중심으로 **시장상황 및 거래동향**을 면밀히 **모니터링**하고 있으며, **편법 증여 등 부동산 탈세혐의**가 확인되는 경우 **세무조사**를 실시하는 등 **강력하게 대처**하고 있다.

○ 특히, **30억원 이상 초고가주택 거래**는 지난해 거래분부터 **순차적으로 전수 검증**을 지속해 나가고 있으며,

**사례** 전자부품 도매업을 운영하는 법인대표 G은 서울 소재 **초고가 아파트**를 ○○억원에 **취득**, 조사결과 **법인 판관비 등 가공경비** ○○억원을 **계상**하는 방식으로 **법인자금을 빼들려** 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어 **법인세 등** ○억원 **추징**

○ **고가 아파트 취득 외국인·연소자**에 대한 **자금출처도 집중 검증**하고 있다.

**사례** 30대 H은 뚜렷한 **소득원** 없이 ○○억원의 **대형평수 신축아파트**와 ○○억원의 **토지**를 **취득**, 조사결과 **부친으로부터** ○○억원을 **현금 증여**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**증여세** ○억원 **추징**

- 아울러, 특수관계자 간 저가양도·매매거래 위장 등 변칙 증여로 의심되는 거래도 빈틈없이 과세하고 있다.

**사례** 모친 I는 자녀 J에게 한강변 소재 아파트를 시가 보다 낮은 ○○억원에 양도, 모친 I에게는 시가를 기준으로 재계산한 양도세 ○억원을 과세하고, 자녀 J는 증여받은 이익에 대해 증여세 ○억원 추징

- 국세청은 앞으로 시장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고가아파트 취득거래는 자금 출처 검증을 대폭 강화하고 증여거래도 빠짐없이 검증할 예정이다.

- 또한,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자금조달계획서를 실시간 공유하는 한편, 「부동산 탈세 신고센터」도 별도 설치하여 부동산 탈세에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.

### 경찰청

- 경찰청은 10월 17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‘특별단속’을 추진 중이다.
- 중점 단속대상은 ‘집값 띄우기’ 등 8대 불법행위로 현재까지(10.28.기준) 총 146건·268명에 대해 조사·수사 진행하여 64명을 송치하였고,

분야 (명)	총계	집값 띄우기 등 불법증개		공급 질서 교란	내부 정보 이용 투기	재건축 재개발 비리	기획 부동산	농지투기	명의 신탁 미등기 전매
		허위실거래 가격띄우기	기타						
총계	268	18	31	32	3	66	6	10	102
송치	64		1	1	-	1	2	-	59
종결	2		-	-	-	-	-	-	2
진행중	199	18	30	31	3	64	4	10	39
기타	3		-	-	-	1	-	-	2

※ 전세사기는 '22년 이후 후 무기한 특별단속 중으로 '25. 6월.~9월 총 966명 검거(구속26)

**사례1** 55명과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각 수탁자들의 명의로 원룸 60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부동산중개업자·건설업자 등 총 56명 송치 (경북청)

**사례2** 재개발 조합 업무추진비로 상품권을 구매하여 개인적으로 소비하는 등 1,000만 원 상당의 조합비를 횡령한 부산 ○○구역 재개발 조합장 송치 (부산청)

**사례3** ○○시 일대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를 개발 가능한 것처럼 속여 시세 대비 최대 53배 폭리 취한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 등 36명 송치 (서울청)

**사례4** 경기 수원·용인·화성시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건물 14채를 사들여 임차인 153명의 전세보증금 203억 원을 가로챈 피자 K구속 (경기남부청)

- 그 중, 국토부의 ‘집값 띄우기’ 의심 수사외뢰건(8건·18명)은 현재 서울경찰청 ‘부동산범죄 전담수사팀’에서 병합·집중 수사를 진행 중이다.

- 경찰청은 향후 지역별 수요에 따른 맞춤형 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다.

- 서울·수도권 등은 시장 교란(‘집값띄우기’ 등)에 수사력을 집중하고,
- 기타 단속 유형에 대해서는 지역별 치안수요 등에 따라 시·도 단위 단속 대상을 지정하여 운영할 예정이다.

지역	서울·수도권 대도시(주택)	기타 중·소도시(토지)
맞춤형 전담수사 과제	▶ 부정청약 등 아파트 투기행위 ▶ 재건축·재개발 비리 ▶ 집값담합 등 시세조작행위	▶ 농지 부정취득 ▶ 기획부동산(지분 쪼개기 등) ▶ 토지 차명거래(명의신탁)

### 부동산 감독 추진단

- 한편, 11.3일(잠정)에는 국무총리 소속 법무처 ‘부동산 감독 추진단(이하 추진단)’이 출범한다.

- 추진단은 국무조정실을 비롯하여, 국토교통부, 행정안전부, 금융위원회, 국세청, 경찰청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상설 조직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·수사에 대한 연계·협업을 강화하여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불법행위에 대응하게 된다.

- 또한 추진단은 부동산 불법행위 범정부 컨트롤타워인 부동산 감독기구의 신속한 출범 준비도 담당한다.

-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는 법무처 추진단을 중심으로 서민과 청년들의 생활을 위협하는 부동산 범죄 행위에 대해 무관용으로 엄정 대응하고, 부동산 불법행위의 확실한 근절을 위해 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.

- 안녕하세요?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입니다.
  - 지금부터 정부의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경과 및 계획과, 부동산 감독 추진단 출범 진행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.
- 부동산 불법행위는 시장을 교란할 뿐만 아니라 서민과 청년들의 경제적 기반을 파괴하는 악성 범죄입니다.
  - 특히, 집값 띄우기, 거래 허위 신고, 부정 청약 등은 시장의 건전성을 해치고 실수요자의 불안을 가중시키며, 주택공급 효과를 떨어뜨립니다.
  - 전세사기, 기획부동산 등은 청년들의 생활을 송두리째 위협하고, 서민들의 내 집 마련 의지를 꺾고 있습니다.
-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는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목표로, 새정부 출범 후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.
  -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을 포함한 부동산 이상거래에 대해서, 금융위원회는 대출규제 위반과 주택 담보대출 유용에 대해서, 국세청은 편법 증여 등 부동산 탈세에 대해서, 경찰청은 집값 띄우기 등 8대 불법행위 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·수사를 진행해 왔습니다.
  - 오늘은 그동안의 대응 상황을 중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. 부처별 조사·수사 경과와 계획은 이어지는 브리핑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.

담당 부서 <총괄>	국무조정실 농림국토해양정책관실	책임자	과 장 황세은 (044-200-2235)
		담당자	서기관 박선동 (044-200-2236)
<공동>	국토교통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	책임자	단 장 김명준 (044-201-3589)
		담당자	팀 장 김광수 (044-201-3606)
<공동>	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	책임자	과 장 권유이 (02-2100-2830)
		담당자	서기관 윤덕기 (02-2100-1690)
			사무관 이송이 (02-2100-1696)
<공동>	국세청 부동산납세과	책임자	과 장 오은정 (044-204-3401)
		담당자	사무관 양창호 (044-204-3417)
<공동>	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과	책임자	과 장 홍승우 (02-3150-2626)
		담당자	경 감 김형인 (02-3150-1726)

- 다음 주에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 
범부처 ‘부동산 감독 추진단’ 이 출범합니다.
  - 부동산 불법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,  
관계기관 간 협업과 정보 공유를  
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.
  - 이에, 각 부처의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 
부동산 감독 추진단을 통해  
보다 긴밀하고 신속하게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응하겠습니다.
  - 이와 함께,  
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범정부 컨트롤타워로  
부동산 감독기구가 조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 
법령 제·개정 등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
- 앞으로도 정부는 부동산 불법행위로 인해  
피해를 입는 국민들이 없도록  
무관용으로 끝까지 적발·조치하고  
신속한 주택공급을 통한 시장 안정과,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 
필요한 조치들을 적기에 시행해 나가겠습니다.
- 그럼 다음으로, 각 부처에서 준비한  
조사 및 수사 경과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.

- 안녕하십니까.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김규철입니다.
- 국토교통부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주택 이상거래, 전세사기,  
기획부동산 등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전반을 지속적으로 조사하여
  - 위반이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등 공정하고  
투명한 부동산 시장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.
- 그 결과 현재까지 총 2,696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여 국세청, 금융위 등  
관계기관에 통보하였고, 그 중 35건은 경찰에 수사의뢰하였습니다.
  - 대표적으로 자기자본 없이 자금조달의 대부분을 특수관계인에게  
차입하여 고가 주택을 구입하거나, 세금 회피 등의 목적으로 부동산  
거래 가격을 실제와 다르게 신고하는 사례들이 확인되었습니다.
- 향후에는 수도권 주택 이상거래로 조사대상을 확대하고, 집값  
띄우기,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조사도 완료할 계획입니다.
  - 10월 15일 발표한 「주택시장 안정화 대책」의 후속조치로 서울 전역과  
경기 12개 지역, 그리고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동탄·구리 등 인근  
지역까지 서울 주택 이상거래 조사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고,  
현장점검을 병행하여 토지거래허가 관련 실거주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 
집중점검할 예정입니다.
  - 다음으로, ‘집값 띄우기’와 관련하여 서울 아파트 해제 신고 중 425건을  
선별해 조사 중이며, 올해 1~8월 계약 해제 건에 대해 우선 조사한  
결과, 의심 정황이 확인된 8건에 대해 이미 수사기관에 의뢰하였으며,  
’23, ’24년 의심거래에 대해서도 조속히 조사를 마칠 계획입니다.

○ 아울러,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와 관련해서는 해외자금 불법반입, 무자격 임대업, 편법 증여 등 위법 가능성이 있는 외국인 부동산 거래 605건을 조사 중으로

- 이 중 주택 거래분은 10월 중 조사를 완료하고, 비주택, 토지 거래분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.

○ 그밖에, 미성년자의 주택 매수나 분양권 거래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병행하여 시장교란행위를 차단할 계획입니다.

□ 국토교통부는 시세교란 행위 등에 대해서 '부동산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'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여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에 적극 대응하고, 국토부 내 부동산 특사경을 지명하여 시장 감독 기능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.

## 참고

## 금융위원회 브리핑문

□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6.27 대책 발표 이후 사업자대출이 가계대출 규제에 우회 수단으로 악용되지 못하도록, '25.7월부터 쏠 금융권'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

\* 은행, 저축은행, 여전사, 보험사, 상호금융(신협·농협·수협·새마을)

□ 이 중 은행권에서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취급한 총 5,805건을 점검한 결과, 약정을 위반하여 대출자금으로 주택을 구입한 45건 총 119.3억원 규모의 대출이 확인되었고, 이 중 25건 총 38.25억원에 대해 대출금 회수를 완료하였습니다.

○ 구체적으로는 기업운전자금 대출(4억원)을 받아 배우자 계좌로 송금한 후 주택구입용으로 활용하거나, 중소기업 육성자금 대출(1억원)을 받아 주택구입용도에 활용한 사례 등이 있었습니다.

○ 아직 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위반사태에 대해서도 차주 소명, 증빙 자료 등 확인 절차를 거쳐 즉시 대출금을 회수할 계획입니다.

□ 이와 같이 약정을 위반하여 대출자금으로 주택을 구입한 차주들은 최대 5년간 해당 은행의 신규 사업자대출이 제한됩니다.

○ 더 나아가, 앞으로는 이러한 약정 위반 사업자의 관련 정보를 신용정보 집중기관인 신용정보원에 등록하여 대출을 받은 해당 은행 뿐만 아니라 모든 금융회사로부터 일정기간 신규 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내년 1월까지 제도화해 나가겠습니다.

□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현재 진행중인 상호금융과 저축은행 등 2금융권 현장점검도 11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며,

○ 앞으로도 이러한 대출규제를 위반하거나 우회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 나가겠습니다.

**참고** 국세청 브리핑문

- 국세청은 시장 과열지역을 중심으로 시장상황 및 거래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,
  - 편법 증여 등 부동산 탈세혐의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.
- 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거래는 전수 검증하고 고가아파트 취득 외국인·연소자의 자금출처도 집중 점검하고 있습니다.
  - 또한, 특수관계자간 저가 양도거래, 매매형식을 위장한 증여거래 등 변칙 증여로 의심되는 거래도 빈틈없이 과세하였습니다.
  - 실제 조사사례를 보면 변칙회계 처리로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하거나 부모로부터 몰래 현금을 증여받은 돈으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여 수억원의 세금을 추징한 사례 등이 확인되었습니다.
- 앞으로 국세청은 시장상황이 안정화될 때까지 고가 아파트 취득거래에 대해서는 자금출처조사 전수와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
  - 증여거래도 시세보다 낮은 가액으로 신고하거나 증여재산 설정된 담보 대출과 전세금을 부모가 대신 상환하였는지 빠짐없이 검증할 예정입니다.
- 또한 자금조달계획서를 실시간 공유하고 「부동산 탈세 신고센터」도 별도 설치해 탈세에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입니다.

**참고** 경찰청 브리핑문

- 경찰은 10월 17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'부동산 불법행위 특별단속'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
  - 이번 단속은 '집값 띄우기' 등 8대 불법행위를 중점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. 현재까지 총 146건, 268명에 대해 조사·수사하여 이 중 64명을 송치했습니다.
  - 구체적 수사현황으로는 '집값 띄우기 등 불법중개 49명', '공급질서 교란' 32명, '재건축·재개발 비리' 66명, '기획부동산' 6명, '농지투기' 10명, '명의신탁' 102명 등입니다.
  - 주요 검거 사례로는, △원룸 60채를 명의신탁한 부동산중개업자 등 56명 송치 △재개발 조합비 1,000만원을 개인용으로 횡령한 조합장 송치 △시세 대비 최대 53배 폭리를 취한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 등 36명 송치 사례 등이 있습니다.
  - 기타, 국토부로부터 '집값 띄우기' 의심으로 수사의뢰 받은 8건(18명)에 대해서는 신속한 혐의 규명이 필요한 만큼 현재 서울경찰청 '부동산범죄 전담수사팀'에서 병합·집중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
- 특별단속 체계 하에서 지역별 수요에 따른 맞춤형 단속을 강화할 예정입니다.
  - 부동산 시장 과열 양상이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, 서울·수도권 등은 집값 띄우기 등 시장 교란행위에 수사력을 집중하되
  - 기타 시·도 단위에서는 지역별 시장 상황, 치안수요 등을 고려하여 중점 단속 대상을 지정할 예정입니다.
- 앞으로도 경찰은, 국조실·국토부·국세청·금융위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부동산 시장 질서를 해치는 불법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.